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최근 여야 리더십이 주목받는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인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의 자격 기준과 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제1야당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 취임 100일을 넘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파장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3월 초순이 유력해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 임기가 3월 13일까지라는 게 일단 기준 시점이다. 그 전이나 그 후나 정도가 쟁점인데 비대위 제정을 가능한 빨리 정상화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문제는 누가 차기 당 대표로 적합 하느냐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대척이 가능하며 (상식·공정·정의의 미래) MZ세대에 인기가 있어야 하고 안정적으로 공전을 할 수 있는 대표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한쪽에서는 "수도권 출신 당 대표론은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고 비판한다. "거론되는 당권주자 중에서 당 대표를 뽑느냐, 좀 늦더라도 새로 사람을 찾아서 하느냐 이런 문

여야의 리더십을 주목한다

제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언급은 '한동훈 차출설'에 다시 불을 붙였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 없다'고 반박하고 한 장관 본인이 직접 "중요한 일 많아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동훈 차출설'은 결국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물론 대통령은 한동훈 논란에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윤심이 한동훈에게 있다는 것을 띄워서 국민과 당원의 반응을 보려했다"는 해석은 지나친 상상력의 산물일 수 있지만 "관저 갔다 와야지 (당 대표에) 낙점이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남겼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7:3인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율을 9:1로 바꾸자는 주장은 '수양버들 당 대표'를 향한 구체적 실행 수단이라고 해석한다. "당 대표는 우리 당원들이 뽑는 것"이라고 하자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톨 변경이라는 오해를 받는다"고 대응한다. 정당들이 국민 세금을 받는 만큼 가능한 믿음을 반영해야 하고 당원만으로 하려면 정당의 국고 보조는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국민의힘 차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2024년 총선 승리다. "의회 권력 교체 없이는 진정한 정권 교체의 완성이라 볼 수 없다"는 말이 정답이다. 총선 승리를 향한 베스트 리더십 조합의 창출이 정진석 비대위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당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짧게는 총선 승리를 통한 윤석열 권력 임기 후반의 안

정과 보장이 가능하고 길게는 보수 가치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토대 확보가 가능하다. 그게 윤 대통령의 역사적 역할이다. 77.77%의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대표 취임 전인 8월 4주차와 12월 첫 주차의 민주당 지지율을 비교하면 3%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변화가 없었고 무당파가 같은 기간에 3% 포인트 늘어난 것을 보면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뚜렷하다. 8월 중순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30% 대통령 지지와 60% 대통령 반대'라는 최근 여론 흐름에도 민주당은 반사이익조차 없었다는 말이다. 특히 핵심 지지층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민주당으로서 아쉬운 대목이다. 20대와 40대는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9%포인트 하락했다. 30대에서 7% 포인트 하락했다. 진보층에서도 7% 포인트 지지가 빠진 것을 보면 결국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40대와 진보층의 이탈이 결정적이다. 여야 리더십 논란은 2024 총선을 향한 승부의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여의도 출장소'나 '체질적 총성 여당'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권력을 선도하는 집권당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과 '분당 가능성'의 우려에서 벗어나 '유능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나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 여야의 리더십을 주목한다.

종교칼럼

평화로 가는 길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평화는 싸움에 없는 상태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싸우지 않는 것에는 휴전도 있고, 냉전도 있다. 평화학자 인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이를 소극적 평화라 했고, 법과 제도에 의한 폭력이나 이를 정당화하는 인습·문화·사상 등 평화를 저해하는 모든 걸림돌이 제거된 상태를 적극적 평화라 하였다. 그는 평화를 성취하는 방법도 평화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나누는 삶뿐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상생 상화의 세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을 선도하고 함께 살아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한가? 탄도미사일과 연이은 대공포의 위협 속에서 서로 상대 국가를 비방하고 싸움이 일어났

상황을 전 세계는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한다. 남북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무기는 이미 인류가 경험한 전쟁의 참혹함을 훨씬 초월하는 무서운 살상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전쟁은 바로 민족의 파멸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남북기분합의서와 전 정부에서의 한반도 남북 정상 회담 그리고 화해와 갈등 속에서 정치적인 쇼라고 하기도 하지만 남과 북이 서로 체제를 존중하기로 한 이상 특정한 체제를 강요할 것도 우월성을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적 제도란 늘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 온 만큼 서로의 체제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남북의 이념적 대립뿐 아니라 지역과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비생산적이고 극한적이며 소모적인 대결 구조에서 보다 수용적이고 창의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열린 의식을 가지고 모두를 담아낼 수 있는 이념을 창출해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어 온 회통의 사상과 3·1 운동 등에서 보여준 종교 간 협력의 전통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사상을 창출해 낼 풍부한 문화적 토양

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토양에 기초하여 남과 북은 종교와 문화, 정치와 사회 등 각 부분에서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한민족 문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종교는 예언자적 지혜를 통해 통일적이고 대중적인 제3의 길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의 통일을 이룬다. 종교가 민족의 화해와 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랜 시간을 넘어오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도 깊어졌고 통일에 대한 방법도 많이 연구되었다. 더욱이 다른 국가의 통일과 냉전 체제의 해체 등 국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일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져 왔으며 한반도 통일 환경도 계속 변화되어 왔다. 정권이 바뀌면서 남북 관계와 남북 통일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정책 변화가 있었지만 남북 상호 간에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고 인도주의·양보주의에 기반으로 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가며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한민족 전체의 행복을 열어가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종교인의 책무라 생각한다. 종교와 정부는 서로 만나고 한마음 한 뜻을 확인하여 과거 식량난 해소와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 등에 함께했듯이 어렵지만 잦은 교류야말로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한다.

기고

남도가 가야 할 길



전동호
전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한 국민의 고향, 남도로 오세요'를 기억하십니까? 한때 전남을 알리는 등록 브랜드였지만 언제부턴가 희미해졌다. '타라이스'이던 쌀은 어떤가? 예전 같지가 않다. 같은 간척지와 문전옥답에서 나오는데도, 짙은 후 15일이면 변하는 유통 관리와 홍보 부족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고 듣고 느끼는 즐길 거리도 보자. 축하는 무엇이 없다. 무슨 묘안은 없을까? 답은 지속성이다. 새로운 시책과 연구 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이 같은 이치다. 세계적인 상표와 제품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미래 가치를 융합할 줄 알았고, 순간의 방치가 돌이킬 수 없는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진리 또한 늘 잊지 않고 있다. 만인의 눈과 귀에 들려 변함없는 신뢰를 만들었다. 남도로 오는 길은 랜잡은가? 아직도 부족하다. 진도, 나로도, 여수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고 광주-순천과 목포-보성 전철화, 십여 년을 짝짝 않는 흑산공항 착공 등 꼭 이루어야 할 일이 많다. 신안과 완도 등의 섬 연결 역시 늦지 않아야 한다. '여수 밤바다'를 가마미까지 수백km나 더할 수 있고, 열두 바림과 낮 빛이

면 된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연일 열리며 엄마의 돌봄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있다. 그들에게 익숙한 도시형 시설이 빈약하다는 현실이다. 지방 기업의 거점별 공공 개발이나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미리 보는 인구 대책이다. 젊은 세대가 늘면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남도에는 특별한 역사와 문화가 있다. 1555년 을묘왜변 조선 최초 의병장 양달사, 1908년 일제강점기 첫 여성 의병 양방매, 1592년 임란 등 난세마다 분연히 일어난 민초들까지, 발길마다 의로운 흔적이지만 여태껏 잘 알지 못했다. 그 기록이 2025년까지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에 담기게 된다. 이래서 '남도'는 더 특별하다. '부산·경남, 충남·대전'은 못하는 '광주·전남'을 통칭하기 때문이다. 그런 데도 남도 음식의 대표격인 김치의 무역 수지가 최근 역전되었다고 한다. 이래선 안 된다. 남도가 나서야 한다. 우리 식탁에 개별 천일염으로 간한 남도 김치를 오르게 해야 한다. 농산물 수입은 그만하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 무엇이 우리 농촌과 국민을 살리는 일인지를 잘 따져 보고도 해야 한다. 또한 해가 간다. 새 빛은 저거지만 여전히 멀어 보인다. 남도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늘 배우고 가꾸며 익혀 가는 길이다. 서남해안 해도림(海島林)과 광야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젊은 교육과 편안한 노후를 그리며, 숨겨진 자연의 행복과 함께 또 무엇을 꿈꾸면서, 어렵지 않게 찾아와 인생 최고의 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날들로 간다.

社說

풍암호수 '수질 개선·환경 보호' 최적안 찾아야

광주시민의 휴식 공간이면서도 악취가 끊이지 않고 있는 풍암저수지의 수질 개선 방안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1956년 농업용으로 조성된 풍암저수지는 1990년 이후 주변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면서 해마다 심한 악취와 녹조가 발생했다. 이에 광주시와 서구는 영산강 물을 끌어와 공급하기도 했지만 5등급까지 떨어진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2019년 풍암저수지를 포함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시작됐다. 광주시와 사업자는 이 사업의 하나로 본격적인 수질 개선 계획 수립에 나섰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TF)도 가동됐다. TF가 수년간 논의 끝에 내놓은 개선안은 자연 유하(流下) 방식으로, 일산·세종·청라 호수공원처럼 각종 위락·편의시설을 갖춘 도심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바닥 일부를 매립해 현재 2.8m인 평균 수심을 1.5m로 낮추고 하루 지하수 1000㎥를 유입하는 게 핵심이다. 담수량도 44만 7000㎥에서 16만 5000㎥으로 줄인다. 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를

340억 원에 매입하고 수질 개선 시설비로 278억 원을 투입하는데, 비용 전액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부담한다. 한데 수질 개선안이 지난 7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된 이후 수심을 낮추는 방안이 '완전 매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매립안에 반대하며 '원형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담수량을 줄이면 홍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지하수를 사용하면 지반 침하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기계 정화나 약품 포설을 제시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정치인들까지 가세하면서 논란만 증폭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고 있다. 광주시가 뒤늦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한 만큼 수질 개선은 물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끊이지 않는 5·18 왜곡 대응 전담 기구 설치를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왜곡·편향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지만 아직도 온라인 등에서는 왜곡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몇 차례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언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 뉴스 기사 댓글과 유튜브 등에서 5·18 왜곡·편향 표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기사 댓글 1761개에서 '문제 표현'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 댓글 중 24건만이 네이버 운영 규정 미준수로

삭제됐고, 유튜브 영상 또한 단 네 개만 삭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집회나 참여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왜곡은 여전히 뿐만 아니라 일부 MZ세대에서는 5·18 왜곡 내용을 담은 10초~1분 이하 길이의 유튜브 쇼츠(Shorts)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뿌리 깊은 5·18 왜곡·편향을 끊어 내려면 먼저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상 혐오 표현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규정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 '5·18 미디어센터'(가칭)와 같은 전담 기구를 세우고, 왜곡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0대 시절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성당에 다닐 때, 미사 중에 가슴을 세 번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라고 외며, 고백의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다. 현재는 이 기도문이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라고 바뀌었다고 들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죄를 하느님께 고하고 사함을 받고자 함이다. 하지만 매주 이 기도를 암송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무의식 중에 잘못을 저지르거나 일이 잘못됐을 때,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습관이 생겼다고 한다.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1989년 사회 정의 개혁운동으로 '내 탓이요' 캠페인을 전개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앞장서 이 캠페인에 전력을 다했으며, 승용차 뒤 유리창에 '내 탓이요'라고 쓰인 스티커를 직접 붙이고 다녔다. 이 스티커 30만 장은 순식간에 배포됐다고 한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했음에도 정치와 모든 분야에서 갈등·대립이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캠페인으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정치권은 민주화

운동 이후 붓물처럼 터진 국민들의 개혁 열망을 무시한 채 사회 통합 대신 상대 진영을 헐뜯으며 권력 다툼에만 몰두했고, 이런 정치 풍토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사회 갈등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내 탓이오'라는 대중가요가 나왔고, '내 탓이오'를 주제로 한 시·수필·동화·공모전까지 열렸을까. 이미 25년이 지난 예기인데, 어쩔 그리도 지금 상황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까.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국민 158명 숨지고, 197명이 부상을 입었다. 세월호 참사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깔려 숨지는 순간을 모두가 손 놓고 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참사 발생 40일이 됐지만 아직도 '내 탓'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 국민은 누구의 잘못인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두가 아는데, 정부는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국민이 안전을 책임지라고 모든 권한을 정부에 위임했음을 자각한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확한 것이다. /채희중 정치담당 편집국장 chae@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편집국인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남본부, 경영지원국, 기획관리국, 디지털,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